



은행동맹 추진 난항 예상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중앙은행(ECB)의 국채 매입 결정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은행동맹¹⁾으로의 신속한 이행이 예상되었으나, 자국 이기주의가 재연되면서 은행동맹 추진에 난항이 예고됨.

● 유럽 내 모든 은행의 감독권을 ECB에게 부여하려는 EU의 방안이 9월 14~15일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, 스웨덴, 네덜란드, 덴마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.

■ 독일은 ECB가 유럽의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대형 은행 60여 개만을 전담하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행시기도 2014년으로 늦출 것을 주장

● 전문가들은 감독상의 어려움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며 독일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저축은행 관리 권한을 ECB에 넘겨주기 싫다는 것이 내면적 이유라고 분석

● 독일은 ECB의 감독권 강화도 EU 집행위 방안보다 한 해 늦춰 2014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
- EU 집행위가 서두르게 될 경우 유로화안정기구(ESM)가 연내 취약 은행을 직접 구제하게 된다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어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모럴헤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

● 또한, 독일은 시중 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ECB로 이양되기 전 모든 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요구함으로써 2013년 1월 시행에 또 다른 걸림돌을 제공

■ 반면 그간 은행동맹에 반대하였던 영국이 찬성으로 선회함에 따라 독일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어짐.

● 9월 18일 영국과 프랑스는 EU 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ECB에 주는 은행동맹을 지지하기로 합의

1) 유럽연합(EU) 27개국 6,000여 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유럽중앙은행(ECB)에 넘기는 유럽통합의 한 단계. ECB는 은행 면허 부여, 인수 및 합병 승인, 건전성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됨. 재정동맹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평가.

- 은행감독기구 출범 연기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지원 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에²⁾ 은행감독에 대한 빠른 합의가 요구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9/18)

2) 6월 유로존 회원국들은 단일 감독기구가 설립되어야만 지역별 구제금융자금이 직접적으로 은행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의.